

## 學校環境教育의 現況과 發展 課題

南 相 駿

한국교육개발원

###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Primary & Secondary Schools

Sang-Joon Na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I.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이지만 그때까지는 국가정책이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환경교육은 자연보호운동과 구별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대규모 공업단지과 농공단지 건설의 확대에 따른 환경의 오염, 도시환경의 악화 및 도시주변 녹지의 파괴, 여가 욕구의 증대에 따른 자연경관 지역의 훼손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환경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완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기관, 연구소 수준에서의 학교 환경교육 연구와 실천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그리고 환경처에 의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외에 민간 단체들과 학회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7년 '환경교육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와 「환경교육 모형단원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관련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보급·전파코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환경교육학회」의 창립(1989년 9월 창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환경처는 198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 의뢰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1992년까지 32개교의 운영을 마쳤으며, 1993년에는 8개교(유치원 2개교,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의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하여 199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992학년도부터 환경교육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과 활동, 특별활동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와 각종 연수시 환경교육 강의 편성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3년부터는 제 6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 II. 「환경과」의 출범과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학교 환경교육은 1992년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교육부가 1992년에 확정·고시하고 1995~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 6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환경과」가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제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재량시간」(3~6학년, 각 학년 연간 34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이 시간에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선택 교과(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간 34~68시간) 중의 하나로서 「환경」교과, 고등학교에는 교양선택 교과에 「환경과학」(4단위, 1단위는 한학기 동안 1주일에 한시간씩의 수업하는 것을 말함)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하나의 사회적 요구를 교육 내용화 하는데 필요로 하는 과정을 너무 짧은 기간에 거쳤으며, 기초적인 연구를 통한 정련의 여유를 갖지 못했고, 각론 연구자들의 참여가 미흡한 상태에서 출범되었기 때문에 많은 미흡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회적 요구가 학교 교육에서 교과목으로 자리잡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론화, 제도화, 체계화 및 내실화의 단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먼저 학교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그 성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진 뒤(공론화), 이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환경교육이 법률과 제 규정에서 명시되고(제도화), 이어서 교육과정의 제정을 중심으로 하여 목적·목표와 내용을 계통성 있게 설정하고(체계화), 제정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환경교육의 실천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자료, 평가 체제·방법, 교사연수, 관련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내실화).

다음에서는 기존의 기초연구, 정책연구, 조사연구의 결과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론화, 제도화, 체계화, 내실화 단계에서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추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1. 학교 환경교육의 공론화

학교 환경교육이 공론화되는 단계에서는 우선 학교 환경교육 실시의 당위성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에 입각하여 그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으로서의 개인의 발달에 필요한 과업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일부분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서 채택된 교과목의 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가정·사회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과의 성립과정의 공론화 단계에서 미흡했던 점은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학교와 교육계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점이다. 공론화 단계의 미흡한 점과 우리가 이제라도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 1)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교육

우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과」가 독립되기 전인 지금까지도 많은 선구적이며 헌신적인 교육자들, 교육 연구자들은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그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교육 자체가 환경문제를 심화시켜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과 교육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해 온 바 있는 한국교육의 병폐들이 바로 환경문제의 한 원인이 되어 온 것이다.

즉, 자연을 정복, 개발하는 인간관 및 세계관을 찬양하는 교육, 권위주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의 학습과정, 조화나 협력보다는 업적주의적인 경쟁체제에 입각한 기존교육의 폐해는 비단 바람직한 인간형성만을 가로막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과괴적인 삶의 방식이나 행태의 근본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전체적으로는 환경운동과 유사한 취지에서 다만 대상과 방법만이 다르게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셈이다. 그러나 운동과 교육은 달라야 한다. 즉, 하나의 사회적 운동은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소멸되는 것임에 비하여 교육은 그렇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환경운동은 현재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환경교육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일어날 환경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그 목적, 내용, 방법이 크게 달라야 한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해야 하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환경은 성인세대의 활동에 의하여 악화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해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오염과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가?”라는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정치권 혹은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성인들의 결정에 도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어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를 이어가며 지켜야 할 청지기의 윤리’라는 측

면에서 대답할 수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현재의 청지기는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성인들이다. 따라서 성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환경자원을 개발, 이용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지구환경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위임 아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나아가 그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으로서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 주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논리를 연장하면 지구환경의 청지기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通時的 인류전체이지 결코 현재 살고 있는 인류만은 아니다. 현재의 우리 세대는 앞 세대에게서 지구환경을 물려받아 관리한 후, 다시 뒷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현재의 성인-청소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인-청소년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현재의 환경을 오염, 파괴하는 데 전혀 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그러한 환경교육은 통시적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논거가 자리잡고 있다.

## 2) 환경문제해력 함양을 위한 총체적 접근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실생활의 장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행동지향적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더욱 크게 파괴되고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단순한 행동이 아닌 가치관, 사고 정향, 태도 등의 변화를 노리는 이른바 환경문제해력(environmental literacy)을 함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과정은 어린이, 학생들이 읽고,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학·기술 중심적 환경교육은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치중립적 과학관에 근거한 환경교육은 고차원적인 시민윤리로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때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때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가 분명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인식되어 있고, 과학·기술의 한계도 어느 정도는 극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 환경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를 환경문제의 한 속성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고 낙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환경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자기 증식성을 가지며, 현재의 환경문제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 현재에 나타난 것이라는 누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것은 과학·기술의 한계도, 환경문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환연한다면 환경문제는 현상적으로는 자연과학적 연구대상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경문제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주요한 접근법은 총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단순히 환경오염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자연과학적인 시각으로써만 바라보도록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환경문제의 발생에는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분명히 사회과학적인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측면을 통합한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환경교육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다루되, 그 원인을 상호관계 등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규명하며, 그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인 환경과 개발의 상호관계, 환경오염, 건강, 평화, 인권, 민주주의, 기아, 생태계의 파괴 등은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환경가치관의 교육

환경교육은 정의적 영역(가치관, 신념, 태도, 참여기능 등)에 강조점을 둔 교육으로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지식'이 가지는 가치는 결코 낮게 평가될 수는 없다. 이는 환경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문제를 완화,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접근으로서의 교육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이해보다 그러한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데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곧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갖추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과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치관은 우리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유도하는 매우 강한 힘을 갖는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교육일반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을 새로이 형성, 변형시킴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키려는 것이며 그 일부분으로서의 환경교육은 환경의 질향상과 유지를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환경교육에서는 가시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자원의 관리에 대한 경제체제, 가치관, 생활양식,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 말은 지나치게 행동 위주의 목표를 설정하여 왔던 그 동안의 환경교육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진정한 환경교육은 표피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밑에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엄연히 지향하는 가치에 바탕을 둔 교육이다. 즉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인 것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기르고, 생태계의 순환질서를 존중하게 되며, 인간의 그릇된 생활방식을 통한 생명파괴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적 활동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태도와 가치는 생태학적 지식의 결여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성에 도덕적, 심미적 측면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바로 위의 논리에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요약한다면 환경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치관 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의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이 기본적으로 환경가치관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학의 이론이다. 즉, 교육이론에서 볼때, 인지적 영역 곧 지식, 이해 등과 같이 주로 우리의 머리 부분과 관련되는 교육내용은 그 위계성이 커서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만약 앞 부분에 대한 학습결손이 있으면 그 앞 부분을 알아야만 배울 수 있는 뒷 부분에 대한 학습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결국 학습

결손이 시작된 부분부터의 내용은 배우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만약 어디서부터 그러한 학습결손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 내기만 한다면 보충하는 것은 비교적 쉬우며 학습자들로부터의 저항도 크지 않다.

그런데, 정의적 영역 곧 가치관, 태도, 신념, 윤리 등 주로 우리의 가슴, 손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위계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든지 결손된 부분을 쉽게 보완하여 줄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미 어떤 다른 종류의 정의적 특성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살아오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의적 특성을 함양하려는 데에는 많은 저항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간이 지니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환경에 친화적인 행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태도, 가치관, 신념, 윤리 등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2. 학교 환경교육의 제도화

학교 환경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목적, 기구의 조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방침과 계획을 각종 법률과 제 규정으로 천명하는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은 1992년도에 「국가환경선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과」 독립으로 대표되는 제도화, 체계화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화, 체계화의 단계가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1) 교육관계법에 헌법의 '환경권' 반영

우리나라의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표현 중에는 국가가 교육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법과 동 시행령에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 관련된 법·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 환경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환경교육법'을

제정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환경교육 장학·편수 체계의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은 교육부→시·도 교육청→시·군·구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장학·편수 체계에서 소외되어 있다. 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 13282 호, 1991. 2. 1)에 환경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하여 효율적인 학교 환경교육의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 6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까지는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의 정신교육장학관이 환경교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교육 장학관의 담당업무에는 환경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교육 장학·편수 체계의 핵심적 부서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1992년에 제 6 차 교육과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학교 환경교육 관련 업무는 사회과학편수관실과 자연과학편수관실의 각각 1인씩의 편수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한 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 환경교육 추진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에 처해 있다. 더욱이,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경우는 환경교육 전담 부서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 및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 장학편수실(환경교육장학관)→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의 초등교육국 초등장학과(환경교육담당장학관)→시·군·구 교육청 학무국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환경교육 담당)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장학·편수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 3) 「환경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 환경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일부이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 환경교육의 일부로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 환경처, 교육연구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환경교육추진위원회」를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여타의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위원회들과의 유기적 체계를 이룩하여 학교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중심체로 삼아야 한다.

#### 4)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의 개선

교육부(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와 환경처는 환경보전·교육시범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학교의 운영이 대상학교 자체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지정했던 환경보전시범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는 전혀 없었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에 지시하여 지정된 환경교육시범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혁신의 전파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교육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는 지역별, 학교급별로 파급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다수의 고등학교를 시범학교 운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시·도별로 관심있는 대학을 지정·지원하여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 및 실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별로 환경보전·교육시범학교의 운영을 특성화하여야 한다.

### 3. 학교 환경교육의 체계화

현행의 제 5 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환경 관련 내용이 사회영역, 과학영역, 도덕·윤리영역 등의 교과목에 분산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독립된 환경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나 선택 교과목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제정

학교교육은 그 속성상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새로운 교육 내용이 기존의 교육체제로 편입될 때에는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적 절차가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헌법의 환경권, 「국가환경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체제에 부합되는 가칭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환경」 교과 및 「환경과학」 과목의 필수 과목화

제 6 차 교육과정이 중학교에서는 「환경」교과,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과학」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제 5 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 6 차 교육과정은 환경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쉽게 발견된다.

즉, 중학교의 「환경」 교과와 고등학교의 「환경과학」 과목 모두가 선택 교과 과목으로서, 중학교의 「환경」은 「한문」, 「컴퓨터」, 「기타」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의 「환경과학」은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등 여러 과목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선택되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예전에는 환경교육이 독립 교과목이 아니었으며 관련 교과목들에서 분산적으로 지도되어 왔었는데,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한때 독립된 「환경」 교과목이 설정되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약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은 1988년에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제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환경」과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을 다른 몇 가지와 함께 횡교과과정적 주제(cross-curricular theme)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분산적 접근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환경」 및 「환경과학」을 선택 교과목으로 설정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진다.

환경교육은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은 물론, 미래 세대가 당면할 환경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는 교육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교육은 '생존을 위한 교육',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를 필수 교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4.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제도화, 체계화된 환경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각종 교수·학습자료, 평가체제·방법, 교사연수, 관련 시설 등의 측면에서 학교현장의 환경교육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환경교육의 定置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강조되고 있는 환경교육 활동(국민학교)이나 「환경」, 「환경과학」 교과목이 많은 학교들에서 선택되도록 하는 포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으로써, 채택된 환경교육 활동 및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입시제도를 환경교육 실시의

제일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환경교과목을 포함한 선택교과목들이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거나, 없을 것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입시위주 교육의 상황하에서는 고등학교는 물론,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도 큰 투자'이지만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눈 앞의 성적 몇점'을 택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환경교육에 가장 큰 장애인 것이다.

##### 2) 상설 연구지원 체제의 설립·유지

「환경과」는 우리 교육사상 최초의 교과목으로서 여타 교과목에 비해 교육이론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일천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내용이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개발 결과를 학교현장에 투입하고, 학교현장의 연구·개발에의 요구 및 투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개발과 학교현장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상설 연구지원 체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설립된 상설 연구지원 체제는 학교 환경교육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가짐으로써 교육부의 「학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한 '학술연구조성비'와 환경처의 '환경보전 홍보용역비'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파악된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연차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전문연구 부서인 한국교육개발원 환경교육연구부와 한국환경교육학회 등의 연구사업, 국내·외의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집중지원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지원 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상설 연구 지원체제가 수립되면 현재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학생용 자료, 환경교육의 성격에 적합한 교수·학습전략, 평가체제·방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 환경과 교사의 양성·연수와 충원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이 성공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을 가르칠 열성있고 질 높은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등학교에 「환경과」가 출범되었다 해서 곧 그 본질에 적합하고 충실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소박한 환상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환경과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목은 반드시 그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대학 수준에서 양성하는 학과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중등학교의 교과목으로 설정된 환경과의 경우도 이러한 전제에서 예외는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중등교사 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 혹은 차선책으로는 환경교육 관련학과에 부전공 과정,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환경과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환경교육과나 환경부전공 및 교직과정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관련 필수과목의 개설 및 이수단위를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환경교육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서 개설하고 이수단위를 규정해야 한다.

중등교사 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비해서 제 6 차 교육과정은 1995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보완 전략 곧 기존의 사회과, 과학과, 도덕과 등의 교원들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연수하여 환경과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환경교육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무시한 미봉적인 조치이다. 환경교육은 결코 사회과 교육, 과학과 교육, 그리고 도덕과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오려 붙인 모자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현직 연수를 통하여 환경과 담당교원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일반연수(60시간)로써는 환경과 교사로 훈련 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므로 자격연수(180시간)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앞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부전공 과정, 교직과정을 신설하거나 자격연수를 통한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관계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즉, 현행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13282 호, 1991. 2. 1)의 제 4 조(자격증 표시과목)는 대학 재학생, 혹은 현직교사로서 일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의 담당과목에 전공과 함께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교육부령 제 594 호, 1991. 3. 16)의 제 2 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가 규정하고 있는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현행 중등학교 교사자격 표시과목들 중에는 1992년에 신설된 「조경」, 「환경설비」가 있으나, 이는 실업계 고교 확충과 직업교육 강화에 따른 것으로서 제 6 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과 「환경과학」 교과목 신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사범대학 및 대학(교)의 교원양성 체제에 부전공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직교사를 연수하여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에 「환경」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 4) 환경교육 관련 시설의 조성 및 활용

먼저, 학교 옥외환경을 환경교육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좁은 운동장, 소음, 매연 등 학교 옥외환경의 열악함 등이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됨을 분명하다. 또한, 환경교육을 위한 목적적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은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학생들의 적극적,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써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정의적 영역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환경 안에서 학습하고, 학습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경험하는 환경교육 관련시설로서 가칭 '환경학습원'을, 국가 수준에서는 가칭 '환경학습공원'을 설립·활용하며,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대 설치토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환경교육에서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을 끌어 들인다. 또한 통계자료, 수식, 표, 그래프를 동원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피교육자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면 통계수치를 보고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 지식 습득 위주의 피상적이며, 실생활 그리고 실천·참여와 일정한 거리가 있기 쉬운 학교 환경교육을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함의와 생활속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처, 한국자원재생공사,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공무원교육원, 자연학습원, 청소년야영장, 국립공원, 쓰레기 매립장, 각종 산업체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